

# 권성동, 李 언급만 18번… “대통령직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李 실용주의, 정치적 가면극 불과 정치 위기 근본적인 해결책 ‘개헌’”

의료개혁 필요… 의·정 대화 재개 연금특위 구성하면 모수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만들기’ 시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18번 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미소짓고 있다. /뉴스1

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원인을 민주당 주도의 ▲정부 인사 탄핵소추안 발의 ▲특검법 추진 ▲2025년도 예산안 삭감 안 처리 ▲상임위 청문회 개최 ▲여야 미합의 법안 강행 처리 등을 꼽았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창한 ‘실용주의’는 집권을 위해 가면을 쓴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쯤 성장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며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국정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권형 개헌, 의료·연금 개혁, 민생 추경·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필수요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책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이재명·권성동, ‘추경’ 연일 언급… 이전차는 ‘그대로’

권성동, 내수회복 등 추경편성 제안 지역화폐 제외·감액안 원상복구 주장 이재명, 최소 30조 규모 추경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있어,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될 모양새다. 다만 ‘벚꽃 추경’을 기대하는 분위기 기입에도, 여야가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등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간 ‘1분기 예산 조기집행 뒤 추경

검토’ 입장보다 전향적인 자세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야당이 지난해 여당을 제외하고 통과시킨 올해 정부 ‘감액 예산안’을 원상 복구하고,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등 정책 소지가 있는 내용을 빼면 당장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론날 경우, 4월 말·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야권 대선 후보는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공약을 내세울 게 자명한데, 여당이 반대하면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이 대표는 추경을 통한 지원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언급하면서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해 여지를 남겨뒀다.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 추

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규모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30조원이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5조~20조원 편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 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차 회담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통상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인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군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뉴스1

## 야6당, 尹 부부 겨냥 ‘명태군 특검법’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차례 거부권을 맞고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명태군 게이트’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별검사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군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 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여, 2022년 대우조선과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한편 특검법의 당사자인 명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 비명계, 개헌론으로 ‘李 체제’ 압박

개헌론 형식, 시기 등 일치하지 않아

정치권에서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사이득을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개헌’을 시대의 의제로 삼으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시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여권은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은 일찍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구축해 이 대표 외에 당

내 차기 대선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이 내세우는 개헌론이 이재명 체제를 흔드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계가 개헌론을 반복해서 내세우면, 이 대표 측에서도 입장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큰 이슈가 된다는 분석이다.

비명계의 개헌론에 대한 형식, 시기는 일치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다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

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기 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선을 그으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개헌 사항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 대표 측은 입법을 통해 소

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여야가 정쟁하는 구도 속에서 극단적인 계엄 사태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의회와 행정부 간 권력 구조 개혁이라든지 개헌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 사이에서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이 합의되지 않고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개헌론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분열된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할 시 현실적으로 두달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여야가 개헌을 합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태홍 기자